

제주 출산 인프라 ‘흔들’

출생아 4명 중 1명 꼴 분만 담당하던 산부인과 폐원
제주대병원 연말까지 고위험 분만 전문의 1명 의존
병원마다 인력난 심화… 고위험 임신부 육지 이송 ↑

제주 출생아 4명 중 1명을 받아온 산부인과가 지난달 폐원한 데 이어 고위험 임신부의 분만을 담당하는 제주대학교병원마저 연말까지 산과 전문의 1명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 폐원에 종합병원 인력 부족까지 겹치며 도내 출산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고위험 임신을 담당하는 산과 교수 3명 중 1명은 휴직 중이고 다른 1명도 9월부터 휴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교수 1명이 고위험 분만을 감당해야 한다.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과 24시간 응급 교대 근무(당직) 체계를 무리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4-6명의 전문의가 필요한데 제주대병원의 경우 이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도내 6개 종합병원 중 일반 분만이 가능한 곳은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3곳뿐으로 제주한라병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기존 환자 중심의 제한적인 분만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민원게시판에는 제주대학교병원에 쌍둥이 진료를 문의했다가 “올해는 예약이 어렵다”는 답을 듣고 서울·부산 대학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임신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미 고위험 임신부가 제주에서 치료받지 못해 바다를 건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소방행기로 고위험 임신부가 타 지역으로 이송된 사례는 총 49건에 이른다.

올해 1월 조기 양막 파열 임신부가 창원으로 이송되던 소방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았고 6월엔 세쌍둥이 임신부가 대구로, 8월엔 임신 24주 임신부가 부산으로 옮겨졌다.

또한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4~2023년)간 제주의 모성 사망비는 출생아 10만명당 17.6명으로, 8.4명인 서울의 두 배

가 넘는다.

제주도와 제주대병원 측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대병원은 산과 교수 외에 부인과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돌아가며 맡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매달 과건 의료 인력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도 “장기 휴직이 아닌 일시적 공백으로 내년부터는 3명 체제로 정상화될 것”이라며 “인력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전체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고위험 임신부를 우선 수용하고 30%인 일반 진료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에도 근본 해법인 의료인력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전국적인 산과 의사 부족에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겹쳐 병원이나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대병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산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산방산과 황화코스모스 2일 서귀포시 안덕면 한 밭에 활짝 핀 황화코스모스가 산방산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거점국립대 대상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선정

제주·강원·전북 ‘3특’ 모두 제외됐다

부산·전남·충남대 3곳 선정… 5년간 4000억 지원

제주대 ‘에너지·우주·바이오’로 도전했지만 고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국립대 대상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지원 대상에 제주대학교를 비롯해 전북·강원특별자치도 거점국립대가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특별자치도’ 육성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 대학, 일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도 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개 지방국립대학교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5년간 4000억원가량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지역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연구 개발에 나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국3특’

(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육성과 대학의 역량이 잘 맞아 단기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을 선별했다”며 “국립대가 국가 균형성장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제주대는 지난달 정부가 제주 3대 성장엔진으로 확정한 ‘에너지·우주·바이오’ 분야를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해 도전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대 관계자는 “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해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것 같다”며 “정부가 지역 성장엔진과 관련 기업 유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2차년도 사업 선정 시에는 준비를 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는 피지컬AI를 내세웠지만 고배를 마셨고, 강원대는 지역 내 지자체와 협약을 맺으며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역량을 연계하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 지원 대상 대학은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연 600억원씩 더 지원받게 되면서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주요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3개 권역 중심으로 제시하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수도권을 중부·서남·동남권 3개 권역으로 묶는 방식은 앞서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계 매가 프로젝트에서도 반영됐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다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자원 배분 과정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미현기자

정부, 오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개 “제주 이전 기관 어디냐” 관심 폭증

도, 한국마사회 등 요청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3일 공개하기로 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를 희망해온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의 이전 여부와 그 외 공공기관 이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수립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기자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제주도는 총 36개의 공공기관을 꼽아 그 중에서 일부 제주 이전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가 핵심 유치 대상이다.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350여 곳에 이른다. 정부는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2027년 이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The 46th National Para Games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6.09.11. - 09.16.

2026. 9. 12(토) ~ 9. 13(일)

제주 함덕해수욕장 & 서우봉 일원

1일차

타이거JK&윤미래

2일차

너드커넥션

홈페이지 바로가기

Jeju 제주시 ·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